

6·25 전쟁기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의 의미와 성과

이광표*

〈차 례〉

1. 머리말
2. 6·25 전쟁과 문화재 해외 반출 프로젝트
3. 문화재 해외 반출을 둘러싼 논란의 전개
4. 해외 반출 논란의 성과와 시사점
5. 맺음말

[국문초록]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이승만 정부는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의 문화재 가운데 금관총 금관 등 204점을 국비리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소개했다(1차 문화재 해외 반출). 이어서 부산으로 옮겨놓았던 18,883점의 문화재를 미국의 호놀룰루로 소개하고 그 일부를 현지에서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2차 문화재 해외반출 계획). 비밀리에 추진되던 2차 문화재 해외 반출 프로젝트는 1952년 9월 정부가 국회에 문화재 반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세상에 노출되었다. 이후, 해외 반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시작되었다.

국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보류-부결-폐기가 거듭되면서 해외 반출 논란은 3년 동안 이어졌고 정부는 3차례나 동의안을 제출해야 했다. 논란이 장기화되는 동안 전쟁은 끝났고 정부가 추진하던 해외 반출의 주요 목적도 해외 소개에서 해외 전시로 바뀌었다. 결국 1955년 4월 국회가 조건부로 해외 반출·전시 동의안을 승인하면서 해외 반출 논란은 마무리되었다. 그 결과,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최초의 대규모 문화재 전시가 열리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6·25 전쟁기에 전개된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의 흐름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와 성과를 고찰했다. 이 논란은 기본적으로 전쟁의 외증에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대피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전쟁 직후의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내보내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3년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단순

* 서울대학교 휴머니티교양대학 교수

한 찬반 논란의 차원을 넘어 문화재 전반에 관해 다양한 논의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문화재를 둘러싼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논란이자 논의였으며 우리 사회의 문화재 인식, 문화재 관리행정, 문화재 전시와 향유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6·25 전쟁, 문화재 반출·소개, 문화재 해외전시, 문화재 반출 논란, 문화재 인식, 문화재 관리

1. 머리말

1957년 5월 서울 덕수궁 국립박물관(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해외 전시 고미술전람회》가 열렸다. 국내 첫 대규모 문화재 특별전으로, 금령총(金鈴塚) 금관, 서봉총(瑞鳳塚) 금관,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백제 산수무늬벽돌, 도기가마인물형명기, 청동은입사물가풍경무늬정병, 청자투각칠보무늬항로, 백자철화포도무늬항아리, 해원 신윤복(蕙園 申潤福)의 <미인도(美人圖)>와 『해원 풍속도첩』, 겸재 정선(謙齋 鄭敼)의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와 <금강전도(金剛全圖)>,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의 <소림명월도(疏林明月圖)>, 이인문(李寅文)의 <강산무진도(江山無盡圖)>, 변상벽(卞相璧)의 <묘작도(猫雀圖)>, 작자 미상 <맹견도(猛犬圖)> 등 우리 문화재의 대표작 182점이 출품되었다.¹⁾ 5월 10일 시작된 이 전시는 예정된 일정(5월 31일까지)을 넘겨 9일이나 연장(6월 9일까지)될 정도로 관람객들의 호응이 뜨거웠다.²⁾

같은 해 12월엔 미국에서 8개 도시를 순회하는 《한국 국보전(Masterpieces of Korean Art)》이 개막했다. 1959년 6월까지 계속된 이 순회전은 우리 문화재의 정수를 대량으로 해외에 내보내 선보인 첫 번째 전시였다.³⁾ 《해외전시

1)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 목록』, 국립박물관, 1957 참조. 한국박물관100년사 편집위원회 편, 『한국 박물관 100년사-자료편』, 국립중앙박물관·한국박물관협회, 2009, 592~600쪽에 재수록.

2) 1957년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시를 찾은 관람객은 51,092명이었다. 문교부, 『문화재 미국전시 보고서』, 1960, 13쪽. 이 보고서에는 전시 연장기간(6월 1~9일)의 관람객 수는 기록되지 않았다.

3) 광복 이후 해외에서 우리 문화재를 선보인 최초의 전시는 1946년 3월 프랑스 파리 체르누스키 박물관에서 열린 《한국미술전(Exposition D'art Coreen)》이었다. 이 전시는 체르누스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유물들을 선별해 전시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2019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체르누스키박물관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전시는 우리가 기획에 관여하거나 문화재를 출품한 경우는 아니다.

고미술전람회》에서 선보였던 182점을 비롯해 모두 193점이 출품되었다. 해외전시에 출품할 문화재는 애초 195점이었으나 불국사의 금동비로자나불좌상과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전시에 출품되지 못했다.⁴⁾

1957년이면 6·25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때였다. 그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문화재 대표작들을 망라한 대규모 전시가 국내와 해외에서 처음으로 잇달아 열린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두 전시가 성사되기까지엔 특이한 내력이 있다. 그 시발점은 6·25 전쟁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전쟁 발발 직후부터 우리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미국으로 소개(疏開)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먼저, 1950년 7월 국립박물관 경주분관 소장품 일부(139건 204점)를 극비리에 미국으로 소개했다(문화재 1차 해외 반출). 곧이어 1950년 10월경부터 추가로 문화재를 미국으로 소개하고 그 일부를 현지에서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문화재 2차 해외 반출 계획). 1차 해외 반출·소개는 국회 동의 없이 전격적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논란이 일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동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2차 해외 반출 계획은 사회적으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오랜 시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952년 9월 정부는 2차 해외 반출에 대한 국회 동의안(「국보 미술품 國外搬出 展覽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로써 해외 반출 계획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⁵⁾ 해외 반출 대상 문화재는 모두 18,883점이었다. 곧바로 문화재 반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해졌고 이로 인해 국회의 동의 절차도 난항을 겪었다. 국회에서 보류-부결-폐기 등이 거듭되면서 정부는 모두 3차례나 동의안을 제출했고 1955년 4월에 이르러서야 국회는 조건부로 동의안(세 번째 동의안인 「문화재 國外展示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재 해외 반출을 둘러싼 논란이 3년 동안이나 이어진 셈이다. 논란이 계속되고

4)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 목록』 참조.

5) 1952년 이승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화재 해외반출 동의안의 명칭은 「국보미술품 國外搬出 展覽에 관한 동의안」이었다. 여기서의 국보는 지금의 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가운데 하나인 국보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국가의 보물' 즉 문화재를 의미한다.

국회 동의 과정이 지연되는 동안 6·25 전쟁도 끝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문화재 해외 반출의 목적도 해외 소개에서 미국 순회전시로 바뀌었다.

그런데 국회가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내건 조건 가운데 하나가 미국 순회전에 출품할 문화재들을 국내에서 먼저 전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전시가 바로 1957년 5월 덕수궁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였다. 국내 첫 대규모 문화재 전시는 이렇게 6·25 전쟁기에 전개된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의 부산물로 탄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있지만 대체로 한국측과 미국측의 논의 과정, 미국 순회전의 성과를 고찰한 것이다.⁶⁾ 문화재 해외 반출을 둘러싸고 3년 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논란에 대해선 아직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그동안 논의에서 제외된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에 주목해 그 흐름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의미와 성과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당시 문화재 해외 반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비판과 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그 논란이 3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논란은 전쟁의 와중에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대피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전쟁 직후의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내보내 전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관한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논란은 문화재 해외 반출과 해외 소개에 대한 찬반의 차원을 넘어 우리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 문화재 관리와 행정 등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특히 동의안에 대한 마지막 심의 과정인 1955년 4월 국회 본회의 심의는 4일 동안 계속되었고 30명의 의원들이 찬반 토론을 펼쳤다. 문화재 해외 반출을 둘러싼 국민 대토론 같은 분위기였다.

필자가 ‘6·25 전쟁기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에 주목하는 까닭은 다음과

6) 장상훈, 『6·25전쟁기 국립박물관의 문화유산 수호』, 『6·25전쟁과 문화유산 보존 : 6·25 전쟁 7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국립고궁박물관, 2020; 장상훈, 『국립박물관 아카이브 기행 19: 문화재 미국 소개 계획』, 『박물관신문』 제575호, 2019; 정무정, 『1950년대 미국에 소개된 한국미술』, 『한국근대미술사학』 제14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5; 정무정, 『한국전쟁과 국보해외소개(疏開/紹介) 그리고 록펠러재단』,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40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0.

같다. 첫째, 이 논란이 문화재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진행된 최초의 본격적인 논란이자 논의였다는 점이다. 문화재 해외 반출과 소개와 해외 전시에 관한 찬반 논란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이동과 포장, 문화재의 안전, 문화재의 존재 의미 등 문화재 전반에 관한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런 측면은 문화재 인식과 수용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6·25 전쟁기뿐만 아니라 이후의 문화재 관리행정에 있어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다. 전쟁을 겪어야 했던 1950년대는 우리의 문화재 환경과 관리행정 시스템이 매우 열악한 시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은 문화재 관리행정 시스템의 취약점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에서는 문화재 관리행정의 문제점과 경험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쏟아졌다. 이러한 지적은 이후 우리의 문화재 행정 시스템 구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 논란의 결과물로 국내외에서 대규모 전시가 처음으로 성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미국 순회전에 앞서 1957년 덕수궁에서 열린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복 이후 첫 대규모 문화재 전시였다는 점, 현재 사람들이 명작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재들이 대거 출품되었다는 점, 전시 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다는 점,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를 다채롭게 기획했다는 점 등에서 그 의미가 두드러진다. 광복 이후 우리 사회가 문화재를 어떻게 수용하고 향유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6·25 전쟁기에 전개된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은 의미 있고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고찰은 1950년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문화재 인식과 수용, 관리와 활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6·25 전쟁과 문화재 해외 반출 프로젝트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우리 문화재를 미국으로 옮겨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당시의 문화재 해외 반출·소개 프로젝트는 1차와 2차의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1차 해외 반출·소개

문화재 해외 반출에 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이었다. 당시 대구에 피란해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은행의 금괴와 함께 국립박물관 경주분관(현재의 국립경주박물관)의 소장품 가운데 중요 문화재를 미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경주분관 소장품의 반출·소개 작업은 국방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⁷⁾ 국방부 제3국장 김일환(金一煥) 대령이 1950년 7월 25일과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경주분관을 방문해 최순봉(崔順鳳) 분관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첫날인 7월 25일 경주분관은 ‘1급 진열품’ 15건 65점의 목록을 만들고 그날 해당 문화재들을 한국은행 대구지점으로 옮겼다. 여기엔 유물번호 9435호 순금제 보관(현재의 금관총 금관), 유물번호 9404호 순금제 이식(금관총 귀걸이), 유물번호 9415호 순금제 대금구(금관총 허리띠 장식) 등 금관총 출토 유물, 황복사 석탑 발견 순금제입상과 순금제좌상(현재의 경주 구황동 금제여래입상과 금제여래좌상)이 포함되었다. 경주분관은 이들 뒤인 7월 27일엔 ‘차급 진열품’ 124건 139점의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유물을 한국은행 대구지점으로 옮겼다.⁸⁾

경주분관은 이런 과정을 거쳐 총 139건 204점의 소개 유물 목록을 작성했

7) 이에 관해선 김재원, 『경복궁야화』, 탐구당, 1991, 77쪽; 『국립중앙박물관 60년사: 1945-2005』, 국립중앙박물관, 2006, 48~49쪽; 장상훈, 『국립박물관 아카이브 기행 19: 문화재 미국 소개 계획』, 참조.

8) 1급 진열품, 차급 진열품이란 용어는 한국박물관100년사 편집위원회 편, 앞의 책, 553쪽에서 인용한 것이다.

다.⁹⁾ 가장 귀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첫날에 먼저 선별해 목록을 작성하고 이틀 뒤 추가 목록을 작성한 것이다. 139건 204점의 문화재는 나흘 뒤인 8월 1일 부산항을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메리카 은행(The Bank of America)으로 옮겨졌다.¹⁰⁾ 첫날 작성한 소개 목록이 금관총 출토품 등 순금제 유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순금제 유물들을 국립박물관 경주분관 소장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문화재 소개 작전을 펼친 것은 1950년 7월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립박물관의 서울 본관과 개성분관, 부여분관, 공주분관이 모두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간 상황에서 경주분관마저 빼앗긴다면 국립박물관의 모든 문화재를 북한군에게 넘겨주는 형국이 된다.¹¹⁾ '전통 문화재=국가 존립 또는 정체성의 상징물'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이러한 판단이 나왔을 것이다.

1950년 8월 1차 해외 반출·소개는 극비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김재원 국립박물관장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¹²⁾ 국립박물관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은 1951년 1월 중순경이었다.¹³⁾ 문화재를 미국으로 반출·소개한 사실은 1952년 2월이 되어서야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처럼 극비리에 해외 반출작업이 진행되다보니 특별한 논란이 일지 않았다. 문화재의 1차 해외 반출·소개 작업이 별 탈 없이 마무리되자 이승만 정부는 곧바로 2차 반출·소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9) 『國立博物館 慶州分館 疏開目錄』, 『한국박물관 100년사-자료편』, 553~554쪽. 1950년 7월 미국으로 반출·소개한 문화재를 139점으로 소개한 글들이 많다. 이는 139건을 139점으로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차 문화재 반출·소개 때 미국으로 옮긴 문화재는 139건 204점이다.

10) 『6·25 전쟁사2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102쪽 각주 85. 미국으로 소개된 204점 가운데 11점은 1957~1959년 미국 순회전 《한국의 국보(Masterpiece of Korea)》에 출품되었고 204점 모두 미국 순회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11) 장상훈, 『한국전쟁기 문화재 부산 소개(疏開)와 국립박물관의 부산 활동 연구』, 『문화재』 제55권 제2호,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116쪽.

12) "경주박물관에 있던 금관총 출토의 금관·금귀고리·요대 등의 진열품이 우리가 서울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간 일이었다. 6·25때 서울을 떠난李大統領은 한국은행의 금덩어리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소개시켰는데, 그때 용케도 경주박물관에 있는 귀중품에도 생각이 미쳐 국방부 金一煥 대령에게 명령하여 경주의 신라 金冠 등의 보물도 미국에 소개시키라고 하였다." 김재원, 앞의 책, 77쪽.

13) 『국립중앙박물관 60년: 1945-2005』, 48쪽.

2) 2차 해외 반출 · 전시 계획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의 문화재를 미국으로 옮기고 얼마 되지 않아 이승만 대통령은 추가로 문화재를 소개하기로 했고 1950년 10, 11월경 문교부와 국립박물관 측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50년 12월 2일, 김재원 관장이 도쿄(東京)에 있는 미국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 민간교육정보국(CIE)의 조지 케이트(George Kate)에게 편지를 보냈다. 김재원 관장은 이 편지에서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국립박물관의 문화재를 해외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¹⁴⁾ 당시는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다시 불리해지는 시기였다. 국립박물관도 1950년 12월 5일부터 1951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서울의 국립박물관과 덕수궁미술관에 있는 문화재 18,883점을 부산으로 소개했다.¹⁵⁾

그 후 조지 케이트는 김재원 관장의 부탁 내용, 한국 문화재가 부산으로 소개되었다는 사실을 미국 연합군 최고사령부 총참모부의 인사국(G-1)에 알렸으며¹⁶⁾ 이는 미국 국무부에도 보고되었다.¹⁷⁾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미국으로 운송할 예산이 없다는 점, 한국의 문화재를 미국까지 장거리 운송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¹⁸⁾ 미국 국무부는

14) “나는 SCAP가 한국 유물들을 안전한 장소에 옮기는데 도와주기를 희망합니다. 유물들은 우리나라 밖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오직 미 정권만이 운송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신은 도쿄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예술과 유적을 담당하는 SCAP의 일원으로서 당신이 서울에 오셔서 우리가 유물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문교부 장관은 유물들이 나라 밖으로 옮기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950년 12월 2일 김재원 국립박물관장이 조지 케이트에게 보낸 편지, 『한국박물관 100년사-자료편』, 536~537쪽.

15) 이에 관해선 『국립중앙박물관 60년: 1945~2005』, 44~45쪽; 김재원, 앞의 책, 69~75쪽; 장상훈, 『6·25 전쟁시 국립박물관의 문화유산 수호』; 장상훈, 『국립박물관 아카이브기행 17: 9·28 수복 이후의 국립박물관과 부산 반출작전』, 『박물관신문』 제573호, 국립중앙박물관, 2019; 김리나, 『한국전쟁 시기 문화재 피난사』, 『미술자료』 제86호, 국립중앙박물관, 2014 참조.

16) 한국박물관100년사 편집위원회 편, 앞의 책, 538쪽.

17) 장상훈, 『국립박물관 아카이브 기행19: 문화재 미국 소개 계획』, 24쪽.

18) 미국 국무부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보낸 1951년 1월 13일자, 2월 9일자 전문. 한국박물관100년사 편집위원회 편, 앞의 책, 540~543쪽. 미국이 난색을 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문화재를 미국으로 옮겨놓을 경우 공산권 국가들이 이를 약탈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재원, 앞의 책, 76쪽; 장상훈, 위의 논문, 24쪽.

1951년 1월 13일 부산의 미국 대사관에 전문(電文)을 보내 미국으로 옮기는 대신 일본이 도쿄제국박물관(현재의 도쿄국립박물관)으로 옮길 것을 추천했다.¹⁹⁾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²⁰⁾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당시의 정서상 우리 문화재를 일본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2차 해외 소개는 이승만 정부와 미국 정부의 견해 차이로 난항을 겪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1951년 3월 5일 미국 호놀룰루 예술원(Honolulu Academy of Arts)의 로버트 그리핑(Robert Griffing) 원장이 “한국의 문화재를 호놀룰루로 옮기게 되면 시설과 경비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²¹⁾ 이후 한국과 미국의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51년 3월경 미국 호놀룰루로 우리 문화재를 소개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후 1951년 7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은 호놀룰루로 문화재를 반출·소개할 것을 지시하는 문서(大秘指文 제6호 『박물관 소장 귀중품 소개 포장에 관한 건』)를 백낙준 문교부 장관에게 보냈다.²²⁾ 문화재 2차 해외 반출·소개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 8,9개월 만이었고, 미국 호놀룰루로 반출을 결정한 지 4개월 만이었다.

국립박물관은 문화재 해외 반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 1951년 12월 까지 소개품 목록을 작성하고 포장까지 마쳤다.²³⁾ 소개품은 모두 430상자 18,883점으로, 이 가운데 국립박물관 소장품이 256상자 10,021점, 덕수궁미술관 소장품이 174상자 8,862점이었다. 1950년 12월부터 1951년 5월까지

19) 1951년 1월 13일자 전문. 한국박물관100년사 편집위원회 편, 위의 책, 540쪽.

20)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국무부에 보낸 1953년 2월 3일자 전문, 위의 책, 542쪽.

21) 1951년 3월 5일 로버트 그리핀 호놀룰루예술원장이 미국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보낸 편지, 위의 책, 540쪽; 김리나, 앞의 논문, 188쪽.

22) “미국 호놀룰루 예술원장 그리핑 씨의 호의적 제의에 의하여 현재 부산에서 소개 중인 국립박물관 소장 귀중품을 右 예술원에서 자비로 搬移 보관하겠다 함으로 한국 국보적 예술품을 널리 전시할 기회도 있어 해서 국립박물관과 문교부 담당관이 목록을 확인하여 미국의 함대편으로 호놀룰루로 이송하라.” 『大秘指文 제6호』, 『국립중앙박물관 60년 : 1945-2005』, 48쪽; 장상훈 앞의 논문, 25쪽.

23) 위의 책, 45쪽.

부산으로 소개해놓은 문화재 전부가 이에 해당한다.

이어 국립박물관은 1951년 12월 18일 「한국정부와 호놀룰루 예술원과의 韓國文化財 臨時 保管에 관한 約定書」를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했다.²⁴⁾ 이로써 문화재 미국 반출·소개를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었고 국회의 동의 절차만 남겨두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재의 호놀룰루 반출은 곧바로 성사되지 않았다. 6·25 전쟁의 전황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1951년 7월 10일부터 정전협상(휴전회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문화재 해외반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계속 미뤄졌다. 그러면서 1년의 시간이 흘렀고 1952년 9월이 되어서야 정부는 「국보 미술품 國外搬出 展覽에 관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화재 2차 해외반출과 관련한 정부의 1차 동의안이었다. 정부의 문화재 2차 해외 반출 프로젝트는 이때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3. 문화재 해외 반출을 둘러싼 논란의 전개

1) 1차·2차 동의안과 해외 반출·소개 논란(1952.9~1954.5)

(1) 비판 여론의 확산

비밀리에 추진되어온 국회 해외반출 계획은 1952년 9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국보미술품 國外搬出 展覽에 관한 동의안」을 처음 제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이 1차 동의안에 따르면, 부산으로 옮겨놓은 문화재 18,883점을 미국 호놀룰루로 반출·소개하고 그 일부를 호놀룰루 현지에서 전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정부가 밝힌 해외 반출 명분은 “전란 중 국보 미술품을 보관하는 동시에 해외 소개 선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²⁵⁾ 그러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8,883점의 문화재를 해외로 소개한다는 것은 매우 민감한

24) 위의 책, 47쪽; 장상훈, 앞의 논문, 25쪽.

25) 「해외서 전람회/국보 미술품 반출」, 『경향신문』 1952년 10월 11일, 2쪽.

사안이 아닐 수 없었다. 18,883점은 포장을 마쳤을 때 모두 430상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다.

곧바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의 문화재 해외 반출·소개 계획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었다. 게다가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에 있던 금관총 유물 등 139건 204점이 1950년 7월 미국으로 이미 반출되었다는 사실(1차 해외 소개)이 1952년 2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터라 2차 해외 반출소개 계획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해외 반출에 대한 반대 여론은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⁶⁾ 전국문화단체총연합이 1952년 10월 29일 발표한 반대 성명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전국 문화인들은 절대로 이 국보해외반출 계획을 반대하는 바이다. 첫째로 한국 累千年 連綿하여 내려온 全문화재를 송두리째 해외로 반출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문화를 하루 아침에 喪失하는 것과 같은 헛헛함을 갖게 한다. 둘째로 이 고귀한 문화재가 해외로 떠남으로써 공산주의자와 싸우고 있는 오늘날 韓國民心에 미치는 바 영향은 진실로 크다. 일반 대중에게 한국동란은 이대도록 위태롭구나 하는 커다란 불안감을 주어서 싸우는 백성들의 의지를 喪하게 할 우려가 큰 바이다. 우리는 국토와 더불어 역사 깊은 찬란한 문화재를 死守하여 最後의 一刻까지 싸워 이겨야 할 것이다. 위정당국과 국회의원의 선처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²⁷⁾

전국문화단체총연합의 성명에는 문화재 해외 반출에 반대하는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 치열하고 치절하게 북한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조의 혼이 담겨 있는 문화재를, 그것도 한두 점이 아니라 18,883점을 미국으로 반출하려는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었다. 문화재의 안전이 아무리

26) 『國寶 海外 搬出說』, 『경향신문』 1952년 11월 2일, 2쪽; 『海外搬出에 여론 沸騰-累千年 조국문화를 상실/文總서 絶對反對를 聲明』, 『동아일보』 1952년 11월 3일, 2쪽; 『나라 파는 행동』, 『조선일보』 1952년 11월 4일, 2쪽; 『文化財 搬出을 絶대 反對한다』, 『동아일보』 1952년 11월 7일, 2쪽.

27) 『海外搬出에 여론 沸騰-累千年 조국문화를 상실, 文總서 絶對反對를 聲明』, 『동아일보』 1952년 11월 3일, 2쪽.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은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문화재만 해외로 대피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화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에서 지켜내야 할 대상 즉 운명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1953년 초에는 경남과 경북 지역 주민들이 국보 반출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도 있었다.²⁸⁾

1952년 말~1953년 초 문화재 해외 반출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전쟁 상황에서 문화재를 해외로 반출·소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관한 것이었다. ‘문화재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비록 전쟁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의 문화재는 우리 영토 안에서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적절한 선택인지에 관한 논란이었다.

(2) 국회에서의 논란

문화재 해외 반출·소개 계획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교위원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동의안 심의도 신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이 늦어지자 1952년 12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 동의안 심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가 진행되었고 이어 1952년 12월 23일엔 상임위인 국회 문교위원회가 동의안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중간보고했다. 문교위원회는 “정부의 문화재 반출 계획에 모순점과 미비점이 있어 정부에 대해 신속한 조치와 보충서류 제출을 촉구해달라”는 내용으로 중간보고 안건을 제출했다. 국회 문교위가 본회의에 보고한 정부 동의안의 미비점은 다음과 같다.

1. 금년 2월 국정감사시 본 위원회에서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보 미술품 139점을 국외에 소개 반출한 사실을 발견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도로 반입하든지 또는 동의 추인 요청하든지)가 없을 뿐 아니라 금차 제출된

28) 『제15회 국회정기회의의 속기록 제77호』, 국회사무처, 1953년 5월 30일, 14쪽.

동의안 국보 목록 중에도 기 반출 국보 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선후 도착(倒錯)인 것.

2. 반출 목적이 문화 선전인지 소개 보관인지 정부 공문 또는 대통령 치사, 기타 로 보아 그 소재가 모호한 것.

3. 동의안의 주요 요소인 약정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오직 추후로 문교부 초안(법제처 심사도 받지 않았다고 공문에 기재)만이 제출되어 있으나 이는 심사대상이 될 수 없음.

4. 미국 국무성이 이 국보 반출을 반대하고 있음을 우리 정부가 충분히 알면서도 일 지방 미술관을 상대로 협정 반출하려는 이 안에 있어 반출 반입 도중, 전람 보관 기간 중의 안전 보증할만한 확고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5. 반출 반입 보관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모다 상대측이 부담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하등 구체적 근거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기 반출 국보 139점에 대하여는 보관료 보험료 연액 821불 45선(仙)(미국 뱅크 오프 아메리카 은행 청구서에 의함)을 우리 정부가 지불하고 있는 사실.

6. 반출 전담하였다가 반입 검수하는 데 있어 과학적(촬영 실측 표식)이고 구체적인(입회인 감사 방법 등) 방안의 준비가 없는 것.²⁹⁾

문교위원회의 지적 가운데 핵심적인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1950년 8월에 1차로 해외 반출·소개한 문화재(139건 204점)에 대한 사후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승만 정부는 1950년 8월 비밀리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메리카 은행에 국립박물관 경주분관 소장품을 옮겨놓았다. 국회의 동의 없이 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했으면 이번 반출 목록에 204점을 포함시켜 사후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 문화재 반출 목적이 문화재 소개인지, 문화 선전인지 그 성격이 모호한 점. 이러한 지적은 당시 전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52년 12

29) 『제15회 국회정기회의의 속기록 제2호』, 국회사무처, 1952년 12월 23일. 2쪽. 여기서 5항의 '851불 45선'은 851달러 45센트를 의미한다.

월이면 전쟁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문화재 소개의 절박함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해외 선전홍보가 필요한지, 문화재 해외전시가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셋째, 미국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개 지방 미술관과 반출 협정을 맺으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미국 정부 차원의 보증도 없이 한국 문화재의 대표작 18,883점을 미국의 지방도시인 호놀룰루의 미술관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반출 문화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 한국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넷째, 문화재 반출과 반입 과정, 미국에서의 보관과 전시 과정에서 문화재의 안전 대책이 부족한 점. 여러 국회의원들은 “반출과 반입, 전람 기간 동안 문화재의 안전을 보장하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출·반입 과정에서 문화재 실물을 확인하고 검수하는 방안이 부실하다는 점을 많이 거론했다. 미국 반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진품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검수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1952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이같은 지적이 많이 나왔다. 결국 국회는 문교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동의안 심의를 보류하고 정부에 보충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³⁰⁾ 그 후 문교위원회는 ①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반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②18,883점에 대한 과학적인 검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1953년 5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조건부 동의안을 심의했다. 본회의에선 해외 반출 목적의 모호함, 반출·반입 과정에서의 문화재 안전 문제, 반출 수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등이 집중 거론되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맞섰지만 정부의 1차 동의안은 우려와 반대 여론을 극복하지 못한 채 부결되고 말았다. 국회의원 152명이 표결에 참여했

30) 『粗忽한 정부 태도를 지적/國寶搬出동의안 국회서 보충서류 제출을 결의』, 『동아일보』 1952년 12월 24일, 2쪽; 『國寶 해외반출전시 동의 보류』, 『조선일보』 1952년 12월 25일, 1쪽.

고 찬성 68표, 반대 81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³¹⁾ 부결 이유는 반출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 증빙서류가 부족하고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반출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등이었다.

한 달 뒤인 1953년 6월 13일 정부는 2차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 때는 정전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든 시기였다. 정부는 2차 동의안에서 반출 대상을 18,833점에서 306점으로 대폭 줄였고 문화재 반출과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대책을 보강했다. 또한 미국에서의 전시 장소를 호놀룰루 한 곳이 아니라 7 곳으로 늘렸다.³²⁾ 정부가 문화재 해외 반출의 목적을 소개에서 전시로 바꾼 것이다. 2차 동의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1953년 12월 상임위원 문교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954년 5월 30일 제2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³³⁾ 그 사이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6·25 전쟁이 막을 내렸다.

2) 3차 동의안과 해외 반출·전시 논란(1954.7~1955.4)

제3대 국회가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난 1954년 7월 19일, 정부는 문화재 해외반출 동의안을 세 번째로 국회에 제출했다.³⁴⁾ 3차 동의안의 명칭은 「문화재 國外展示에 관한 동의안」이었다. 앞서 제출한 1차와 2차 동의안은 「국보 미술품 國外搬出 展覽에 관한 동의안」이었지만 3차 동의안에서는 ‘국외 반출’이란 용어가 사라지고 ‘국외 전시’란 용어가 등장했다.

31) 「제15회 국회정기회의의 속기록 제77호」, 19쪽.

32) 「제20회 국회정기회의의 속기록 제32호」, 국회사무처, 1955년 4월 21일, 11쪽.

33) 1955년 4월 21일 국회 본회에서 김법린 문교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제2차로서 정부에서는 단기 4288년(4286년의 오기임-필자 주) 6월 13일에 다시 그때 당시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해서 전시 방법을 정비하고 전시 품목을 축소하고 그래가지고 동의안을 내용을 일신한 뒤에 다시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당년 4286년 12월 제2대 국회 문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그것으로 말하면 제2대 국회의 만기가 되어서 이것이 그대로 결정을 짓지 못하고 남아 있던 것입니다.” 「제20회 국회정기회의의 속기록 제32호」, 4쪽.

34) 「문제의 국보반출案/정부 또 국회에 동의 요청」, 『동아일보』 1954년 7월 21일, 2쪽; 「국보해외전시/국회에 동의 한 제출」, 『조선일보』 1954년 7월 21일, 2쪽; 「제20회 국회정기회의의 속기록 제32호」, 4쪽.

1954년 7월은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1년이 지난 시점이었기에 문화재 소개의 필요성은 사라졌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문화재 반출의 목적을 소개에서 해외 전시로 바꾸었고 국회 동의안의 명칭에서도 ‘국외 전시’를 전면으로 내세운 것이다. 당시 이선근 문교부장관은 1955년 4월 2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문화재 해외반출 목적을 “국보 전시 문제가 처음 대두되었을 때는 전시(戰時)였던 만큼 그 목적이 소개에 있었으나 지금은 민족문화를 해외에 소개하지는 것 이외에 아무 목적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³⁵⁾

그런데 3차 동의안의 국회 제출 이후, 정부의 생각과 달리 또다시 반대 여론이 터져나왔다. 『동아일보』는 1954년 12월 4일자에 「國寶를 해외에 搬出말라」는 사설을 실었다.

국보를 해외에 전시한다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문화를 사랑하지는는데 주목적이 있으리라.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국보를 해외로 운반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파손과 도난의 위험성도 있다. …해외 전시를 위해서 국보를 흐트리지게 한다는 것은 현명한 처사라고 하기 어렵다. …북한괴뢰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英文팸프렛 하나도 예산이 없다고 못만들고 있는 처지에, 佛蘭西·伊太利에서도 못하는 국보 해외전시를 한국에서 하겠다는 그 동기를 알 수 없다.³⁶⁾

『동아일보』 사설은 먼저 비용 문제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후 복구와 민심 안정이 시급한 1954년 상황에서 굳이 해외 전시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어수선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문화재를 외국으로 내보내 전시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문화재 해외 전시의 경험이 없었기에 첫 해외 전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고 이것이 반대 여론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우려는 모두 전쟁 직후라는 시대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35) 「제20회 국회정기회의의 속기록 제32호」, 4쪽; 「本會議 同意 與否 注目-文化財國外展示案 결의」, 『동아일보』 1955년 4월 22일, 1쪽.

36) 「國寶를 해외에 搬出말라」, 『동아일보』 1954년 12월 4일, 1쪽.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동의안은 1954년 8월 6일 문교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때부터 심의가 진행되었다. 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인 여론에 귀를 기울였다. 문교위원회는 1954년 9월 3일 조건부로 동의안을 통과시킨 뒤 1955년 4월 21일 본회의에 조건부 동의안을 상정했다.³⁷⁾

이 때 문교위가 제시한 조건은 ①문화재 국외 전시의 목적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도록 할 것 ②문화재 국외전시위원회를 조직해 중요 사안을 심의 결정할 것 ③반출 문화재의 수량을 400점 내외로 할 것 ④국가 소유 문화재뿐만 아니라 민간인 소장품도 목록에 포함할 것 ⑤1950년 7월 반출된 문화재(139건 204점) 가운데 일부를 해외전시에 출품할 것 ⑥전시품의 검수·증빙 방법을 확실하게 해 전시품 인도·인수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⑦해외 전시에 앞서 국내 전시를 먼저 진행할 것 ⑧전시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것 등이었다.³⁸⁾

국회는 4월 21일(목) 본회의를 열고 조건부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질의 응답과 토론은 4월 22일(금), 23일(토), 25일(월)까지 이어질 정도로 치열했다. 나흘 동안 본회의에서 발언한 의원은 30명에 달했다. 토론된 내용은 전쟁 직후의 열악한 상황에서 해외전시가 과연 적절한지, 문화재의 이동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출품 문화재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해외전시에 앞서 국내 전시를 개최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이 주를 이루었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진행된 질의와 응답, 토론의 과정이었지만 논의의 내용도 풍성하고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3차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내 전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한 것이다. 1차와 2차 동의안 심의 때는 거론되지 않은 내용이었

37) 1955년 4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법린 문교위원장은 3차 동의안의 경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문화재 국외 전시에 관한 동의안건에 대해서는 작년 7월 15일자로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로부터 우리 본 원에 요청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8월 6일자로 문교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 이래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로 심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술계라든지 학계, 언론계, 각 계각층의 권위자를 초청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각계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자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그런 결의를 해서 본회의에 회부되었는 것입니다.” 『제20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32호』, 4쪽.

38) 『제20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32호』, 4~5쪽; 『本會議 同意 與否 注目-文化財國外展示案 질의』, 『동아일보』 1955년 4월 22일, 1쪽.

다. 다수의 의원들은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갖고 나가 전시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 국민에게는 보여주지 않는가” “국내의 여건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이선근 문교부 장관은 이러한 주문을 받아들였다. 국회 문교위원회가 조건으로 제시한 국내 전시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나흘간의 찬반 토론과 논의를 마치고 국회는 1955년 4월 25일 문교위가 상정한 조건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144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찬성 79표, 반대 33표였다.³⁹⁾ 이렇게 해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시작된 ‘문화재 해외 반출 프로젝트’가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그 구체적 결과물은 미국 8개 도시에서 열리는 《한국 국보전》과 그에 앞서 국내에서 열리는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였다. 두 전시는 모두 국내외에서 열린 첫 대규모 문화재 전시였다.

3) 논란의 흐름과 쟁점

(1) 전쟁 중의 해외 반출·소개 논란

1차·2차 동의안 제출과 이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모두 6·25 전쟁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해외 반출을 둘러싼 논란도 전쟁 상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따라서 전쟁의 와중에 문화재 18,883점을 해외로 반출·소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가 논란의 주요 쟁점이었다.

해외 반출 찬성론은 전쟁을 피해 안전한 미국으로 문화재를 옮겨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에서 국보를 안전지대에 놓고, 하여간 전쟁이 종결된 뒤에 다시 가져온다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으로 생각을 합니다.”와 같은 견해가 대표적이다.⁴⁰⁾

그러나 전쟁 종식 이후에 복구와 재건을 하게 될 때 외국의 지원을 이끌어

39) 『제20회 국회정기회의의 속기록 제35호』, 국회사무처, 1955년 4월 25일, 11쪽.

40) 1952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욱 의원의 발언. 『제15회 국회정기회의의 속기록 제2호』, 6쪽.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기대도 깔려있었다. 1953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1차 동의안을 심의할 때, 김법린 문교부장관은 해외 반출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확실히 단군의 혈족으로서 우리의 예술과 문화를 국제적으로 이것을 전시해서 이것을 선전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 때가 더욱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앞으로 우리가 전란을 수습하고 戰災에 대한 여러 가지 재건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문화적으로 이 심려를 국제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불초한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동의해 주십사 하는 것이올시다.⁴¹⁾

그러나 반대론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더욱 이 땅에서 문화재를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화계의 반대 성명과 국회에서의 반대 의견을 소개한다.

이 고귀한 문화재가 해외로 떠남으로써 공산주의자와 싸우고 있는 오늘날 韓國民心에 미치는 바 영향은 진실로 크다. 일반 대중에게 한국동란은 이대도록 위태롭구나 하는 커다란 불안감을 주어서 싸우는 백성들의 의지를 꺾하게 할 우려가 큰 바이다. 우리는 국토와 더불어 역사 깊은 찬란한 문화재를 死守하여 最後의一刻까지 싸워 이겨야 할 것이다.(1952년 11월 문화단체총연합이 내놓은 반대 성명서)⁴²⁾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무엇이 한가로워서 우리 잘난 것을 천하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날로 우리가 고생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자랑을 외국에 가서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1953년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재완 의원의 발언)⁴³⁾

41) 『제15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77호』, 14쪽.

42) 『해외 반출에 여론 비등-累千年 조국문화를 상실, 文總서 絶對反對를 聲明』, 『동아일보』 1952년 11월 3일, 2쪽.

43) 『제15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77호』, 15쪽.

인용한 글에서 드러나듯, 반대론은 문화재를 해외로 내보낼 경우 국민들에게 열패감과 허탈감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쟁 상황에서 문화재를 운명 공동체 또는 정신적인 버팀목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전쟁 후의 해외 반출·전시 논란

3차 동의안은 6·25 전쟁이 끝나고 1년이 지난 1954년 7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전쟁이 끝난 상황이었기에 문화재의 반출 목적이 해외 소개에서 해외 전시로 바뀌었다. 이승만 정부는 문화재의 해외 전시를 통해 우리 문화와 전통을 홍보하고 전쟁으로 추락한 국가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들의 용기를 북돋우며 국제사회에서의 추락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는 문화재 해외 전시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당시의 주요 쟁점은 전쟁 직후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해외 전시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해외 전시가 과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찬성론은 전후(戰後)의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해외에 선보여야 한다는 견해였다.

전시가 유형무형 간 계속되고 우리 민족에 대한 선진 우방의 인식을 하로 빨리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리혀 이러한 시기일수록 아까 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원조를 받는다든지 외국 인사들의 이해를 가한다든지 하는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국가의 앞날이 평탄치 못하고 우리가 될수록 세계 각국 국민 앞에 우리 조국이나 우리 민족을 좀 더 인식을 새롭게 좀 더 양양을 시키자 이 점은 도리혀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1955년 4월 21일 국회 본회의의 3차 동의안 심의 때, 이선근 문교부장관의 설명)⁴⁴⁾

44) 『제20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32호』, 14쪽.

우리는 하로 빨리 우리 문화를 국외 선전사업으로 추진해서 우리에게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물며 국토 통일과 경제 부흥에 있어서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의 물질적 정신적 지도가 절대로 기대되는 이때이니만치 우리는 몽고나 서장(西藏)이 아니라는 것을 서양 각국에 알려야 될 것이고 우리 문화의 역사적 지위를 똑똑히 인식시켜야 될 것이고…….(1955년 4월 21일 국회 본회의의 3차 동의한 심의 때, 김법린 국회 문교위원장의 발언)⁴⁵⁾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문화재를 서둘러 해외에 내보내 전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었다.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여전히 국민들이 문화재를 이 땅에서 지켜야한다는 것이었다.

후전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전란이 가라앉지 않은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국보는 우리나라 민족과 영원히 생명을 같이 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한 이 국보는 우리 국토를 떠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1955년 4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일도 의원의 발언)⁴⁶⁾

찬성론과 반대론은 전쟁 직후이 열악한 상황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달랐다. 찬성론은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우리 전통과 문화를 선전할 수 있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악한 상황일수록 우리의 문화를 해외에 선보여야 한국의 추락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존재감을 부각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과정이 외국의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반대론은 “어수선한 상황에서 홍보는 적절치 않다. 우리 사회가 여러모로 안정을 되찾은 뒤에 해외 홍보 선전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었다.

45) 『제20회 국회정기회의의 속기록 제32호』, 4쪽. 김법린 문교위원장은 제2대 국회 때엔 문교부장관으로 문화재 2차 해외 반출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었다.

46) 『제20회 국회정기회의의 속기록 제33호』, 국회사무처, 1955년 4월 22일, 18쪽.

(3) 문화재 반출 과정과 방식 등에 관한 논란

문화재 반출 절차와 과정, 반출 수량 등에 관한 내용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1차와 2차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 내내 문화재 해외 반출의 절차나 과정이 서투르고 비과학적이라는 비판, 반출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계속되었다. 1953년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재완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이러한 중대한 민족사상의 정화요, 4000년 역사의 유산인 이것을 외국에 내보낼 때에 이것을 싹싹 털어서 내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민족정신에 한때 빈곤을 느낄 것이요, 한편 허무한 공허를 느낄 것입니다. … 이 1만8883점을 한꺼번에 싹싹 털어서 보낼 의도가 나면에 있는가.(1953년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재완 의원의 발언)⁴⁷⁾

우리나라 국보를 참으로 전시하고 싶으면 10점이나 20점 혹은 30점을 해외에 반출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지만 1만8000여 점을 전부 싹 반출해서 해외에 전시한다고 하니 이것은 반출인지 전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1953년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홍엽 의원의 발언)⁴⁸⁾

반출 목적이 소개든 전시든 해외로 반출하는 문화재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었다. 국회는 반출 문화재의 수량을 줄일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1차, 2차, 3차 동의안을 심의해나가면서 반출 문화재는 18,883점에서 400점 내외로 줄었다. 이는 전쟁이 끝나면서 해외 반출의 목적이 소개에서 해외 전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출 문화재의 수량이 줄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3차 동의안이 통과된 후, 구체적으로 유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반출 문화재(미국 순회전 출품 문화재)는 195점으로 확정되었다.

문화재 반출의 과정이나 절차 등에 대한 논란과 논의도 그치지 않았다. 반

47) 『제15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77호』, 15쪽.

48) 『제15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77호』, 16쪽.

출·반입시의 안전 확보 문제, 협정과 계약의 주체 문제, 가치 평가 문제, 포장과 검수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과학적인 검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1만 8,000여 점을 반출한다고 하는 그것은 이미 포장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 포장 내용에 대해서 무슨 사진을 백여두었다는지 무슨 특별히 우리가 안심하고 내놓을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 중간 분실이 된다는지, 악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중 어떤 불량분자가 있어가지고 그 좋은 국보를 훔쳐내고 다른 가짜를 집어넣어도 모르게 되었던 말이에요.(1952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재완 의원의 발언)⁴⁹⁾

슬쩍 나갔다가 슬쩍 돌아오는 동안에 훌쩍 뒤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요새는 위조품 같은 것 상당히 잘 만듭니다.(1955년 4월 21일 국회 본회의 조영규 의원 발언)⁵⁰⁾

반출·반입과정에서 문화재가 다른 것이나 가짜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4) 국내 전시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문화재 해외 반출·전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국내 전시를 먼저 개최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국내 전시의 필요성은 3차 동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3차 동의를 국회에 제출한 정부는 “국내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해외 전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제대로 문화재를 전시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먼저 제대로 된 전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상황이 열악할수록 국내에서 제대로 된 문화재 전시를 기획해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반론이었다.

49) 『제15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2호』, 5쪽.

50) 『제20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32호』, 10쪽.

우리나라 문화재를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고 관람케 할 충분한 기회를 주고 난 뒤에 외국에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순서가 되지 오히려 지금 문교부에서 문교위원회에서 나온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박물관이 파괴되었다, 미술관도 부족하다 그러니 국내에서는 전시할래야 전시할 장소도 없고 소장할 수 없으니 국외에서 전시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오히려 역설로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나라의 박물관을 복구시키고 파괴시킨 것을 수리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먼저 이것을 전시해서 관람할 기회를 주고 난 후에 그다음에 문화재를 외국에 이것을 전시하더라도 그다지 늦지 않을까.⁵¹⁾ (1955년 4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해정 의원의 발언)

왜 국보를 갖다가 그런 문화재를 외국에 전시시키는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있는 문교부장관께서 왜 수리해가지고 … 국민한테 일체 보여주지 않느냐 말이에요.(1955년 4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영규 의원의 발언)⁵²⁾

또 중요한 사실은 해외전시를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가지고 충분히 국민으로 하여금 인식을 깊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전 국민을 향해서 충분히 선전하고 인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1955년 4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정희 의원의 발언)⁵³⁾

당시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의 전개 과정으로 볼 때, 문화재 반출·전시가 성사되려면 반대론의 논리를 극복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했다. 국내 전시의 필요성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국민들이 먼저 우리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체험해보아야 해외 전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3차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문교위는 “문화재 해외 전시의 목적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킬 수

51) 『제20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33호』, 7쪽.

52) 『제20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32호』, 11쪽.

53) 『제20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35호』, 6쪽.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내 전시는 바로 이러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논의를 거쳐 국내 전시가 성사되었다. 미국 순회전을 개최하기에 앞서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국내에서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전시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해외 반출을 둘러싼 논란에서 찬성론과 반대론의 대립을 해소하는 일종의 절충안이었다.

4. 해외 반출 논란의 성과와 시사점

1) 문화재 인식의 심화

문화재 해외 반출·소개 프로젝트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이승만 정부가 전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었고 그로 인해 여러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회의 동의안 심사도 계속 지연되었다. 1952년 9월 정부가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표면화된 논란은 1955년 4월 비로소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3년 동안 진행된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은 단순한 찬반 대립의 차원을 넘어선다. 6·25 전쟁 직후인데도 우리의 문화재 환경도 열악했고 문화재 관리 시스템도 체계화되지 못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반출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화재를 바라보는 인식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문화재의 반출과 이동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일이다. 특히 전쟁 상황이었기에 더욱 민감하고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김재원 국립박물관장의 회고를 보면 6·25 전쟁 당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문화재를 옮기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당시 극비리에 문화재 소개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박물관이 먼저 부산으로 떠났다면 아직 아무 것도 모르는 서울시민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므로 그것을 피하고자 한 비상조치였다.”라고 회고했다.⁵⁴⁾ 국내에서의 문화재 소개도 이렇게 민감한 일인데 하물며 외국으로 반출한다는 것은 더더욱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백낙준 문교부

장관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그때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문화재는 부산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도난이나 화재의 위험 또는 적기의 의한 폭격의 피해도 생각해야만 할 상황이었다. 문화재의 안전을 위하여 잠시 해외로 피난시키는 것이 어떠한 안이 나왔었는데, 누구나 반대하였다. 그것은 부산 창고에 있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었다. 해외로 피난시키는 것이 더 안전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나. 우리의 얼이 담긴 문화재가 이 고국을 떠난다는 것은 패전의 전조 같아서 민심의 동요를 가져올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문화재는 우리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⁵⁵⁾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 해외 반출 프로젝트를 처음 추진했던 백낙준 문교부 장관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문화재 해외반출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매우 민감했지만 전쟁이 한창이었기에 이 문제를 피해갈 수도 없었다. 그만큼 문화재의 존재 의미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 상황에서 우리의 문화재를 해외로 소개할 것인지, 이 땅에서 끝까지 지켜낼 것인지는 단순한 듯하지만 매우 깊은 고민과 성찰을 요하는 주제였다. 이는 문화재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일 것인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이 6·25 전쟁이라는 수난기에 3년 동안이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 사회는 문화재의 존재 의미를 좀 더 깊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국내 전시를 기획한 점이다. 해외 반출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전시를 기획한 것은 일종의 절충안이었고 갈등의 조화이기도 했다. 그 타협과 조화는 1957년 덕수궁 국립미술관에서 열린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로 구체화되었다. 이 국내 전시는 광복 이후 첫 대규모 문화재 전시로, 우리 문화재의 대표작들은 한자리에

54) 김재원, 앞의 책, 70쪽.

55) 백낙준, 『백낙준전집9-회고록·증강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412쪽.

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해외 반출 여부를 떠나 문화재는 이 땅의 국민들과 함께 할 때 그 존재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체득하게 된 것이다.

해외 전시 출품목록에 전형필, 손재형과 같은 개인의 컬렉션을 포함시킨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 개인 컬렉션의 의미를 대중들이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또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문화재 관리행정에 대한 성찰

6·25 전쟁기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은 문화재 관리 행정과 시스템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국회에서 논란과 논의가 거듭되면서 여러 쟁점을 조율하고 정부의 해외 반출 계획을 보완·수정하게 되었고 문화재 해외 반출과 해외 전시를 기획하는 방식이 점차 정교해졌으며 의미 있는 조건들이 추가되었다.

국회에서는 해외 반출·반입시 문화재의 안전, 해외 전시의 계약 진행방식, 문화재 훼손 시의 보상, 반출 문화재의 가격 평가, 문화재의 포장과 수송 수단 등 매우 세세한 항목까지 관심을 갖고 논의했다. 국회는 문화재 이동 과정에서 신중하고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 제시하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데다 해외 전시 경험이 없던 상황이었기에 정부와 국립박물관으로선 매우 효과적인 지적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은 문화재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기여했다

1950년대는 문화재나 박물관을 둘러싼 여건이 매우 열악했다. 정부는 해외 전시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당시 이선근 문교부장관의 발언이 이같은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국내의 박물관 업무를 강화시키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문화재를 한번 외국에 소개함으로써 이 면에서 외국의 원조를 받는다든지 충분

한 협력을 얻는데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 이번 기회에 저는 이 해외 전시를 추진시켜서 우리 문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으로써 우리가 국내 미술관 업무를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데도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1955년 4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선근 문교부 장관의 발언)⁵⁶⁾

해외 전시를 통해 미국의 선진적인 문화재 관리시스템을 경험하고 나아가 유형·무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하는 심경이 잘 담겨 있다. 이선근 문교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문화재 관리행정 시스템, 박물관의 운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1955년 4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도연 의원이 한 발언도 유사한 맥락이다. 그는 “해외에 전시가 시급한 것보다도 국내의 박물관이라는 것을 충실히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⁵⁷⁾ 이 또한 문화재와 박물관 관리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1955년 4월 국회는 문화재 해외 반출에 관한 3차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나흘 동안이나 본회의를 열었다. 이 본회의는 문교위원회가 상정한 조건부 동의안에 대해 단순히 찬반 토론하는 차원을 넘어 해외 반출과 관련된 문화재 행정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건부 동의안은 문화재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적잖은 성과를 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문화재 해외전시위원회를 구성한 점, 반출 문화재에 대한 과학적이고 치밀한 검수 방안을 논의한 점, 반출 문화재의 수량을 적절하게 조절한 점, 해외 반출·전시 대상에 개인 컬렉터(전형필, 손재형)의 소장품도 포함시킨 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개인 소장품 가운데 명품들을 해외 전시에 포함시킴으로써 미국 순회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결국 1957년 국내 전시와 1957~1959년 미국 순회전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의 예상치 못했던 성과였지만 1950년대 문화재 관리행정 시스템을 성찰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56) 『제20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33호』, 15쪽.

57) 『제20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33호』, 10쪽.

3) 문화재 향유 기회의 확대

3년에 걸친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 덕분에 1957년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가 열릴 수 있었다. 6·25전쟁 직후 국내의 박물관 상황과 문화재 전시 여건은 열악했다. 문화재를 제대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했다. 서울의 국립박물관조차 경복궁, 남산, 덕수궁 등지를 전전해야 했다. 부산으로 옮겼던 창덕궁의 왕실유물은 1954년 12월 화재로 3200여 점이 소실되는 참사를 겪었다.⁵⁸⁾ 그렇기에 제대로 된 대규모 문화재 전시를 기획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3차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러한 국내 상황을 해외 반출·전시의 명분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다.

그런데 해외 반출·전시에 비판적인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국내의 상황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오히려 더 국내에서의 대규모 문화재 전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들에게 문화재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자부심을 고양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정부도 결국 국회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1955년 4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선근 문교부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박물관 보유의 모든 문화재를 왜 하루 빨리 전시를 하지 않느냐, 먼저 국내에서 전시하고 그 다음에 나갈 것이 좋지 않느냐? 적절한 질문이올습니다. ... 문화재를 해외로 내보내기 전에 먼저 국내에서 전시할 계획이서 있고 그렇게 할 작정이올습니다.⁵⁹⁾

1955년 4월 국회의 조건부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1955~1956년 미국 순회전에 출품할 문화재를 선정하는 작업, 미국 순회전이 열릴 도시와 장소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⁶⁰⁾ 선정된 출품작은 모두 195점이었다. 여

58) 『재로 化한 國寶』, 『경향신문』 1955년 1월 6일, 2쪽.

59) 이선근 문교부 장관의 답변, 『제20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32호』, 16~17쪽.

60) 미국 순회전이다보니 미국측 관계자와 한국측 관계자가 함께 전시 대상을 선정했다. 출품 문화재 선정에는 미국측에서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동양부장 앨런 프리스트(Alan Priest), 보스턴미술관의

기엔 1950년 8월 미국으로 소개된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의 문화재 가운데 11점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기획된 1957년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는 국내 첫 대규모 문화재 전시로, 국민들의 문화재 수용과 향유의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 순회전을 6개월 앞둔 1957년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덕수궁 국립박물관에서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가 열렸다. 미국 순회전에 출품될 문화재 195점 가운데 182점이 선보였다.⁶¹⁾ 이 전시는 애초 5월 31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6월 9일까지 연장될 정도로 관람객의 호응이 뜨거웠다. 한 달 동안 열린 이 전시엔 11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고 한다.⁶²⁾ 광복 이후 처음 기획된 대규모의 문화재 특별전이었다는 점, 우리 문화재의 대표 명작들이 대거 출품되었다는 점, 전쟁의 폐허 위에서 열린 전시였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은 것이다.

국내 일간지와 잡지들은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와 관련해 다양한 기사를 내보냈다. 단순한 전시 안내뿐만 아니라 출품작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국보의 존재 의미를 설명하는 기사들이었다.⁶³⁾

동양부장 로버트 페인(Robert Paine)이 참여했고 한국측에서는 고희동, 전형필, 배림, 손재형, 홍종인이 참여했다. 김재원, 앞의 책, 112쪽. 이와 관련해 유물 선정 과정에서 미국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진열품 선정은 결국 대부분 미국측의 의견대로 결정되었고 한국위원의 의견은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만치 그때에는 우리나라는 미술에 대한 국제적인 안목이 높지 못하였던 것이다.” 김재원, 같은 책, 116쪽. 정무정, 「1950년대 미국에 소개된 한국미술」도 참고가 된다.

- 61) 미국으로 옮겨진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의 11점과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에 나오지 못했다.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 목록』 참조. 불국사의 불상 2점은 미국 순회전에도 출품되지 않았다.
- 62) 장상훈, 「전쟁의 시련을 딛고 피어난 문화외교의 꽃, 한국국보전」, 『6·25전쟁과 국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2020, 74쪽. 당시 문교부의 집계에 따르면 5월 10~31일 관람객은 51,092명이었다. 앞의 각주 2 참조.
- 63) 『海外展示國寶展』, 『경향신문』 1957년 5월 11일, 4쪽; 『海外展示 한국국보전』, 『한국일보』 1957년 5월 11일~22일, 4쪽(총 12회); 『海外展 古美術 紙上展』, 『조선일보』 1957년 5월 13일~29일, 4쪽(총 10회); 김기창, 「문화외교」, 『경향신문』, 1958년 5월 14일, 1쪽; 「국보이야기-외국에 자랑되는 민족精華」, 『동아일보』 1957년 5월 20일, 4쪽; 김청강, 「絢爛한 민족예술의 祭典- 해외전시국보전에 붙여」, 『경향신문』 1957년 5월 21일, 4쪽; 김기창, 「문화외교의 의의- 해외전시국보전 소감」, 『조선일보』, 1957년 5월 22일, 4쪽.

일찌기 우리나라에 여러 번 예술품의 전시회가 있었으나 그러나 이번처럼 縱的인 시대적으로 보나 橫的인 지역적으로 보나 광범위에 걸쳐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대중 앞에 보인 적은 없었다.⁶⁴⁾

우리 민족문화사상 한국미술사상 일대 획기적인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전시회는 실로 우리 고미술의 최고봉을 망라한 것인만큼 민족예술전당인 느낌을 자아내었다.⁶⁵⁾

위 인용문처럼 전시의 전체적인 의미를 높이 평가한 기사도 있었지만, 출판작의 일부를 잇달아 소개하는 기획연재물이 특히 두드러졌다. 『한국일보』는 『海外展示 한국국보전』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시리즈를 내보냈다. 1957년 5월 11일자부터 5월 22일자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출판작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기획이었다. 지면에 소개한 문화재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청자상감모란무늬항아리, 청동은입사물가풍경무늬 정병, 청자원숭이모자모양연적, 백자철화포도무늬항아리, 도기기마인물형 명기, 정선의 <인왕제색도>, 신윤복의 <미인도> 등이었다.

『조선일보』는 1957년 5월 13일자부터 5월 29일자까지 총 10회에 걸쳐 『海外展 古美術 紙上展』 시리즈를 기획했다. 출판작 가운데 10점을 골라 그 특징과 의미를 쉽고 간략하게 소개하는 기획이었다. 여기 소개된 문화재는 서봉충 금관,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옛 제78호, 현재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1962-1)⁶⁶⁾, 변상벽의 <묘작도>, 신윤복의 <미인도>, 청자어룡형주전자, 백자철화포도무늬항아리, 도기기마인물형명기 등이었다. 신문의 이같은 기획시리즈는 1950년대 후반 대중들의 문화재 인식과 문화재 향유에 영향을 미쳤다.⁶⁷⁾

64) 김청강, 앞의 논문.

65) 김태오, 「한국 고미술과 민족성」, 『사상계』 1957년 11월호, 사상계사, 103쪽.

66) 문화재청은 2021년 11월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의 번호를 폐지했다. 옛 국보 제78호와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경우, 번호 폐지로 인한 혼돈을 막기 위해 전자는 1962-1, 후자는 1962-2의 번호를 괄호 속에 표기하기로 했다. 여기서 1962는 국보 지정연도를 의미한다.

한편으로 출품작의 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외에 내보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함을 선보이기에는 그 양이 부족하고, 출품작 가운데 청자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⁶⁸⁾ 그러나 이같은 지적 또한 역설적으로 국내 문화재 전시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이었다.

1957년 덕수궁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는 6·25 전쟁기 문화재 해외 반출(해외 소개와 해외 전시)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얻게 된 예상치 못한 부산물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란의 위기를 이겨낸 우리 문화재 대표작들을 대량으로 실견(實見)하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호응이 컸다.

1957년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는 광복 이후 대중들이 문화재와 전통미술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향유하며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문화재 18,883점을 무더기로 해외 반출할 경우 자칫 국민의 사기가 저하될 뻔했으나 국내 전시 사전개최라는 절충안을 찾아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재의 존재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문화재 해외 반출과 해외 전시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⁶⁹⁾

4) 시사점

이 논란은 문화재 해외 소개와 해외 전시, 문화재 반출을 둘러싼 국내 첫 사회적 논란이자 논의 과정이었다. 약 70년 전 6·25 전쟁기에 벌어진 논란이었지만 문화재 해외 전시, 문화재 관리행정, 문화재 향유 등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찰과 인식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해외 전시를 위한 문화재

67) 이때 『조선일보』에 <미인도>가 소개된 것의 의미와 영향에 관해선 김지혜, 「신윤복, 『미인도』의 부상」, 『명화의 탄생 대가의 발견』, 아트북스, 2021, 165~194쪽 참조.

68) 이상백, 「國寶를 網羅치 못한 國寶展 -국보해외전시품을 보고」, 『한국일보』 1957년 5월 15일, 3쪽; 이상백, 「국보해외전시품을 보고-재론」, 『한국일보』 1957년 5월 17일, 3쪽; 「국보 이야기-외국에 자랑되는 민족精華」, 『동아일보』 1957년 5월 20일, 4쪽.

69) 미국 순회전은 《한국 국보전(Masterpieces of Korean Art)》이라는 이름으로, 1957년 12월 14일부터 1959년 6월 7일까지 미국의 8개 도시(워싱턴, 뉴욕, 보스턴, 시애틀, 미니애폴리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호놀룰루)에서 열렸다. 『국립중앙박물관 60년 : 1945-2005』, 83쪽; 문교부, 『문화재 미국전시 보고서』, 1960 참조.

반출을 둘러싸고 유사한 논란이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문화재 해외 반출을 둘러싸고 최근 벌어진 논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3년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1962-2, 옛 국보 제83호) 반출 논란을 들 수 있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특별전 《황금의 나라, 신라》(2013.10~2014.2)에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출품할 것인지를 놓고 전개된 찬반 논란이었다. 반출 찬성론은 이 특별전에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출품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자는 견해였고 반출 반대론은 해외 전시에 너무 자주 출품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견해였다.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화재위원회는 전시가 열리기 6개월 전에 조건부로 해외 반출을 승인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문화재청장은 훼손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후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가 중재에 나섰고 한 달 뒤 문화재청이 불허 결정을 철회함으로써 논란이 마무리되었다.⁷⁰⁾

이 논란의 핵심 쟁점은 문화재의 해외 전시 출품을 어떻게 볼 것인지, 특히 국보급 문화재의 잦은 해외 반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였다. 당시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쟁점은 문화재 활용(해외 전시)과 문화재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끌어낼 것인지, 문화재 해외 반출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제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같은 쟁점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유일본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공인 전시 복제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⁷¹⁾ 이렇게 문화재 해외 반출을 둘러싼 논란과 논의가 심화되어 가는 형국이었지만 이후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일회성 논란으로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였다.

70) 이에 관해선 이광표, 『한국의 국보』, 컬처북스, 2014, 241~242쪽 참조.

71) 유의정, 「해외전시를 위한 문화재 반출 관련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760호, 국회입법조사처, 2013 참조.

이 대목에서 6·25 전쟁기의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은 적잖은 교훈을 준다. 특히 찬반 여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해외 반출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내 전시라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성과였다. 미국 순회전시에 앞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획한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는 당시 사람들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전통미술과 문화재의 존재 의미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외 반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의 양자 택일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절충안을 이끌어 냈고 그것이 문화재 인식과 향유의 기회로 작용하면서 해외 반출·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셈이다.

문화재는 보존과 활용(해외 반출·전시)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고 국보급 문화재 반출을 둘러싼 논란은 언제나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6·25 전쟁기에 3년 동안 진행되었던 해외 반출 논란은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단순한 찬성 반대 논란이 아니라 시대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반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5. 맺음말

문화재 해외반출 프로젝트는 6·25 전쟁이라는 돌발 상황에서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옮겨 안전하게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8월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의 문화재 가운데 금관총 출토 유물 등 139건 204점을 극비리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소개했다(1차 문화재 해외 반출). 이어 이승만 정부는 부산으로 옮겨놓았던 18,883점의 문화재를 미국의 호놀룰루로 소개하고 그 일부를 현지에서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2차 문화재 해외반출 계획). 비밀리에 추진되던 2차 문화재 해외 반출 프로젝트는 1952년 9월 정부가 국회에 문화재 반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세상에 노출되었다. 이후, 해외 반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시작되었다.

국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보류-부결-폐기가 거듭되면서 해외반출 논란은

3년 동안 이어졌고 정부는 3차례나 동의안을 제출해야 했다. 논란이 장기화 되는 동안 전쟁은 끝났고 정부가 추진하던 해외 반출의 주요 목적도 해외 소개에서 해외 전시로 바뀌었다. 결국 1955년 4월 국회가 조건부로 해외 반출·전시 동의안을 승인하면서 해외 반출 논란은 마무리되었다.

6·25 전쟁기에 3년 동안 계속된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다. 해외 반출에 대한 찬반 논란의 차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문화재와 관련된 다양하고 의미 있는 논쟁과 토론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전쟁 상황과 전쟁 직후의 상황에서 문화재 해외 반출·소개와 해외 전시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해외 전시의 의미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각종 협약 등은 어떻게 체결해야 하는지, 해외 전시에 내보낼 문화재의 수량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반출·반입시 문화재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고 진품 확인을 위한 검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우리에게 문화재는 어떤 존재인지 등에 관한 논쟁과 토론이었다.

전후(戰後)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대규모 문화재 전시를 기획해본 경험이 없던 상황에서, 해외 반출·전시와 관련된 논쟁과 토론은 정부와 국립박물관이 문화재 행정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의 부산물로 생겨난 국내전시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는 예상치 않게 찾아온 대규모 문화재 전시였다. 이 국내 전시는 해외 반출 찬성론과 해외 반출 반대론의 갈등을 중재하는 일종의 절충안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문화재의 존재 의미에 대한 성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많은 관객들이 전시장을 찾았고 주요 언론들은 전시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이 전시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재와 전통 미술의 매력을 경험하고 그 존재 의미를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6·25 전쟁기의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은 단순히 찬반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을 넘어 문화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하고 향유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과 성찰의 과정이었다. 이런 점에서 '6·25 전쟁기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은 광복 이후 최초의 본격적인 문화재 논의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 참고문헌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 고연희 외, 『명화의 탄생 대가의 발견』, 아트북스, 2021.
 『국립중앙박물관 60년: 1945-2005』, 국립중앙박물관, 2006.
 김리나, 『한국전쟁 시기 문화재 피난사』, 『미술자료』 제86호, 국립중앙박물관, 2014.
 김영기, 『장려한 한국미술의 조류』, 『서울신문』 1957년 5월 22일자.
 김재원, 『경복궁 야화』, 탐구당, 1991.
 _____, 『박물관과 한평생』, 탐구당, 1992.
 김청강, 『현란한 민족예술의 제전』, 『경향신문』 1957년 5월 22일.
 문교부, 『문화재 미국전시 보고서』, 1960.
 백낙준, 『백낙준전집9- 회고록·증강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송희경, 『1950년대 전통화단의 '인물화』』, 『한국문화연구』 제28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5.
 신선영, 『일제강점기 신윤복 풍속화의 浮上和 재평가』, 『미술사학연구』 제301호, 한국미술사학회, 2019.
 유의정, 『해외전시를 위한 문화재 반출 관련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760호, 국회 입법조사처, 2013.
 『6·25 전쟁과 국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2020.
 『6·25 전쟁사2: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이광표, 『한국의 국보』, 컬처북스, 2014.
 이상백, 『國寶를 網羅 못한 國寶展 - 국보해외전시품을 보고』, 『한국일보』 1957년 5월 15일.
 _____, 『국보해외전시품을 보고 - 재론』, 『한국일보』 1957년 5월 17일.
 장상훈, 『국립박물관 아카이브 기행 17: 9·28 수복 이후의 국립박물관과 부산 반출 작전』, 『박물관신문』 제573호, 2019.
 _____, 『국립박물관 아카이브 기행 19: 문화재 미국 소개 계획』, 『박물관신문』 제575호, 2019.
 _____, 『6·25전쟁시 국립박물관의 문화유산 수호』, 『6·25전쟁과 문화유산 보존: 6·25 전쟁 7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국립고궁박물관, 2020.
 _____, 『한국전쟁기 문화재 부산 소개(疏開)와 국립박물관의 부산 활동 연구』, 『문화재』 제55권 제2호,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정무정, 『1950년대 미국에 소개된 한국미술』, 『한국근대미술사학』 제14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5.
 _____, 『한국전쟁과 국보해외소개(疏開/紹介) 그리고 록펠러재단』,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40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0.
 한국박물관100년사편집위원회 편, 『한국 박물관 100년사-본문편』, 국립중앙박물관·한국박물관협회, 2009.
 _____, 『한국 박물관 100년사-자료편』, 국립중앙박물관·한국박물관협회, 2009.
 한필동, 『해외전시국보전을 보고』, 『연합신문』 1957년 5월 27일자.

Jang, Sang-hoon, "Cultural Diplomacy, National Identity and National Museum: South Korea's First Overseas Exhibition in the US, 1957 to 1959", *Museum and Society* 14(3), University of Leicester, 2016.

The Meaning and Achievement of the Controversy over ‘the Overseas Shipment of Cultural Properties’ around the time of the Korean War

Lee Kwang Pyo*

In July 1950, shortl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Syngman Rhee government secretly evacuated 204 cultural properties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Gyeongju branch to San Francisco, the United States(The first overseas shipment of cultural properties). Following this, the Syngman Rhee government began to evacuate 18,883 cultural properties that had been moved to Busan to Honolulu, the United States, and to display some of them there(The second overseas shipment of cultural properties). The second overseas shipment project, which had been secretly promoted, became known to people when the government submitted a mo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in September 1952. Since then, controversy has begun over the pros and cons of overseas shipments.

As the motio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as repeatedly suspended, rejected, and scrapped, controversy over overseas shipments continued for three years, and the government had to submit the motion three times. During the prolonged controversy, the war ended and the main purpose of the government’s overseas shipment was changed from overseas evacuation to overseas exhibition. Eventually, in April 1955, the National Assembly conditionally approved the motion for overseas shipment and exhibition, and the controversy over overseas

* Professor, Seowon University

shipment was concluded. As a resul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first large-scale exhibition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was held.

In this paper, I specifically examined the flow and aspects of 'the controversy over the overseas shipment of cultural properties' and its meaning and performance. The controversy was basically about whether it was appropriate to evacuate Korean cultural properties abroad or whether it was desirable to send our cultural properties abroad to display them. However, it lasted for three years, leading to various discussions on the overall cultural properties beyond the simple controversy over pros and cons. It was the first debate and discussion about the Cultural Heritage in Korea. And it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recogni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our society, the management administra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 exhibition and enjoyment of cultural properties.

Key words: the Korean War, overseas shipment and evacuation of cultural properties, overseas exhibition of cultural properties, controversy over the overseas shipment of cultural properties, awareness of cultural properties, cultural properties management